

2013년 제10호
2013년 10월 11일(금)
한농연중앙연합회
회원지원센터

한농연 조직 활성화 소식지

전화 : (070)7165-0017
전송 : (02)3401-6549
http://kaff.or.kr
kaff0001@gmail.com

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 대표·직원 쌀직불금 지급 제외로 불만 제기

-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의 대표, 이사, 직원 등이 연간 3,700만원 이상의 급여·보수·배당을 받을 경우 쌀소득보전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로 인해 불만 제기(한국농어민신문, 2013년 10월 10일자 보도)
 - 쌀소득보전직불금의 경우 정치인이나 비농업인이 수령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된 일이 왕왕 발생했음(예 : 2008년 10월, 정부부처 모 차관 후보자 쌀직불금 부당 수령 사건). 이에 정부에서는 비농업인이나 농외소득이 3,7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
 - 그런데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에서 직접 영농을 하거나 가공, 유통, 영농대행, 농자재판매 등을 하는 대표, 이사, 직원 등에게는 발생한 이익을 급여·보수·배당금 등으로 지급하고 있음
 - 문제는 이렇게 지급된 이익금까지 모두 농외소득으로 분류, 3,700만원이 넘을 경우 쌀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임. 물론 개인이 아닌 법인명의로 직불금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, 이 또한 법인 설립 후 3년 이상 지나야 가능함. 결국 이 조건을 채우지 못한 일부 법인대표들은 쌀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
 - 이에 농식품부 담당자는 “정책시행 과정 중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꾸준히 해 나가겠다”고 밝혔음

농업인교류센터, 사건심의위원회 개최, 부여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사건 지원

- 부여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백미 부실사고 관련 지원 방침 결정
 - 지난 10월 4일 오후 1시부터 한농연부여군연합회 사무실에서 농업인교류센터 사건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음. 이 자리에는 심의위원인 법무법인 다산 김영기 변호사, 강만수 법무사, 한농연중앙연합회 황진열 전문위원 및 실무자가 참여하였음. 부여군에서는 우구제 한농연부여군연합회 회장(부여군농업인단체협의회 회장 겸임) 등 농업인단체장들이 참여하였음
 - 여기에서는 지난 2월 드러난 부여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의 백미 부실사고와 관련하여, 당시 △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를 포함하여, △이사였던 부여군 관내 지역농협의 상임이사-전무는 물론, △대의원이었던 관내 조합장 등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(형사)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(민사) 등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었음
 - 사건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이 사건이 △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공적인 사건으로써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고, △부여군농업인단체협의회 차원의 형사 고발(혹은 형사소송

제기) 등에 필요한 법률적 지원 활동(조력 지원)을 해 줄 것을 결정하였음

- 이에 부여군농업인단체협의회는 관련 자료를 입수·정리하여 법무법인 다산에 제공하기로 하였으며, 법무법인 다산은 이를 토대로 형사고발(형사소송 제기)을 위한 자료 준비를 10월 31일까지 마치고 부여군농업인단체협의회에 제출하기로 하였음
- * 농업인교류센터는 금년도 사건심의위원회 예산 소진시까지 타 사건에 대해서도 지원을 실시할 것이며,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하여 지원할 방침이오니, 한농연 회원 및 농업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용을 요청드립니다.
- 담당 : 오준호 대리 (070-7165-0013)

우수농업경영인 인증제도 도입 연구용역 마무리...향후 농식품부 행보에 주목

- 우수농업경영인 인증제도 도입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주요 내용 및 한농연의 입장(10월 1일, 정부세종청사)
 - 기존 후계농업경영인(한농연 회원)은 물론 일반 농업인에 대해서까지 우수농업경영인 인증제도(현행 추가지원 제도를 약간 변경·적용)를 실시하여, 우수한 농업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토록 해야 한다는 게 최종보고서의 핵심 내용임
 - 최종보고서를 검토한 지정토론자들은, 인증제도의 성격상 어느 한 분야라도 최소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탈락토록 돼 있기 때문에, 한농연 회원이나 일반 농업인들이 실제 인증을 받아 추가지원 자금을 받기가 까다로워질 수도 있다는 패널들의 지적이 제기되었음
 - 특히 △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제도는 정부 농업인력 육성 정책의 핵심이며 정상경로이므로, 인증 제도 도입을 계기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제도가 약화되는 결과가 나타나서는 안되며 △우수농업경영인 인증자에 대한 정책자금 금리 인하, 농신보 보증한도 확대, 신용대출 한도 확대 등의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는다면, 한농연 회원은 물론 일반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였음
 - 한농연은(한민수 회원지원실장 패널 참여), △인증받은 인원을 위한 정책·금융상 인센티브가 불명확하고 △시군·시도에 평가위원회를 두지 않고 농업인단체 대표(한농연 시군·시도회장)를 배제한 채 전문가들만 평가에 참여시키겠다는 방침은 잘못된 것임을 강력히 지적하고 연구용역 내용대로 추진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음
 - 나아가 △50대 초중반의 한농연 회원들은 컴퓨터 및 인터넷을 활용한 경영관리나 브랜드 홍보 등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,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평가안대로라면 일방적으로 불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것을 주장하였음